

第269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10月9日(火)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 가. 노동부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고용보험기금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審査된案件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1
 - 가. 노동부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 가. 고용보험기금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시19분 개의)

○위원장 **홍준표**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정부 측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가. 노동부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고용보험기금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위원장 **홍준표**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9회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권익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선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고령자 등 수요자별로 특화된 고용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 부합하는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선진적 노사관계 기반마련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용시장과 노사관계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용률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적극적인 고용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차별해소를 통한 근로조건 향상과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더 많은 고용기회의 제공과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자립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청년 등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한편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공공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출제 등 과정관리를 체계화·합리화하고 국가기술

자격혁신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한 자격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여성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취약근로계층의 권익 보호와 차별해소를 지원하고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 지원확대와 재할급여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 주도의 노사발전재단 운영과 지속적인 노사협력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노사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형성토록 하겠으며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해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회계연도 노동부 재정 총규모는 21조 2562억 원이며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10조 5457억 원으로 금년보다 0.4% 감소한바 이는 주요 요양·휴업급여의 감소 추세를 반영한 산재보험급여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금액은 금년보다 8.3% 증가한 9919억 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회계별 총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9323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37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46억 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3억 원입니다.

한편 내년도 노동부 소관 기금운용 총규모는 20조 2644억 원입니다.

기금별 총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이 11조 7119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조 4687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573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534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73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노동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노동부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차관 등의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노민기 차관입니다.

정종수 정책홍보관리본부장입니다.

송영중 고용정책본부장입니다.

송봉근 노사정책국장입니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입니다.

김병옥 산업안전보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재갑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이기권 고용정책관입니다.

이우룡 노동보험정책관입니다.

이채필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이인규 감사관입니다.

허원용 홍보관리관입니다.

박찬형 재정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조재정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실무추진 단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중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원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산하단체장입니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용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입니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입니다.

김철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용웅 학교법인 기능대학 이사장입니다.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장 인사)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정종수**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정종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총괄,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편성방향입니다.

우선 2008년도 예산편성은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에 두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노사협력분위기를 확산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도 지속 투자하였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노동부 일반지출 예산은 금년 대비 0.4% 감소한 10조 5457억 원입니다. 이 중 예산은 9461억 원이며 기금은 9조 5997억 원입니다. 일반지출의 감소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 요양합리화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감소에 따라 주로 산재보험기금에서 감소하였습니다. 회계 기금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고용지원센터의 임차보증금 반환금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185억 원이 감소한 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별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이행 강제금 신설 등에 따라 과태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임차보증금 등 반환금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759억 원이 증가한 99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7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1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는 진폐 사망자 감소 등에 따라 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246억 원, 노사정책사업이 52억 원, 근로조건보호사업이 10억 원, 국제노동협력사업이 32억 원 등 증가하였으며 고용정책사업이 39억 원, 산업재해예방사업이 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정책사업의 감소는 주로 공무원으로 전환된 직업상담원의 인건비가 노동행정 지원으로 재분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고용정책사업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은 사회적 기업 참여인원

확대 등에 따라 금년보다 513억 원이 증가한 17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은 220억 원, 해외취업 지원에 1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층에게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입니다.

먼저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는 63억 원, 고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49억 원,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는 94억 원,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신규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에 436억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70억 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3억 원, 영세자영업자와 새터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62억 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하여 6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에 자격검정사업, 외국인고용관리 등 6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0개소 기능대학 운영비 및 대학 개축비, 섬유패션대학 확대개편 등 학교법인 기능대학 운영에 1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도서관 증축 등에 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평등실현사업입니다.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 등에 2억 원,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에 3억 원,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2억 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사정책사업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지원 등 노사파트너십 강화에 1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등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65억 원,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에 32억 원, 한국노동교육원 출연에 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조건보호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42억 원, 근로감독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48억 원, 임금직무체계 개선 지원을 위하여 8억 원, 퇴직연금제도

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재예방사업입니다.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진폐위로금 474억 원, 광산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진단과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에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노동협력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ILO 의무부담금 지급 등 국제기구 협력 지원에 74억 원, 노동분야 통상협력대책 추진에 6억 원, 파독 광부 복지사업을 위하여 2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행정 지원입니다.

지방노동관서 청사 신축 및 유지 관리에 258억 원, 노동행정 혁신 및 노동행정 정보화 지원에 141억 원, 노동정책 연구 개발 및 노동통계 조사에 40억 원, 종합노동상담센터 운영에 9억 원, 노동위원회 운영에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내부 거래로서 일반회계의 기금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 전출금 102억 원, 산재기금 전출금 155억 원, 장애인기금 전출금 200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금에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된 제주도 이관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이관된 고용정책사업비 22억 원 등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어서 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노동부 소관 기금의 2008년도 총 운용규모는 20조 2644억 원이며 이 중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9조 5997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기금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우선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기반을 확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등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취업 취약계층 고용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실업급여 수급 인원 증가 등에 따른 증액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보험료 3조 8092억 원, 재산수입 4330억 원 등 11조 7119억 원으로 금년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조 8536억 원, 실업급여 2조 5622억 원 등 4조 7789억 원을 지출하고 6조 883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별 계획(안)입니다.

먼저 고용안정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1308억 원,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에 15억 원, 장기실업자 및 실직 여성가장 창업 점포 지원에 150억 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15억 원, 장애인 고용관리 컨설팅 지원에 5억 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용자에 100억 원,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에 611억 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 108억 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에 23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 430억 원, 재고용장려금에 10억 원, 전직지원장려금에 29억 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165억 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에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지원금을 위하여 29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에 32억 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9억 원, 취업애로계층 민간취업기관 지원에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원사업으로 종합직업체험관 건립에 196억 원, 24개소의 고용지원센터 자체 청사 매입에 1520억 원,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253억 원, 전문계 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을 위해서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질의 고용정보와 효과적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전산망 관리에 169억 원, 고용보험전

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83억 원, 채용박람회 지원에 15억 원,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에 20억 원,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15억 원, 직업정보 제공과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50억 원, 대학졸업자의 직업이동경로 조사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위하여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능력개발사업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훈련 지원에 대한 사업주 비용 지원에 3311억 원, 사업주·훈련법인 등에 대한 능력개발시설·장비자금 대부에 84억 원, 기업의 사내기술자격검정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직실업자 취업훈련 지원에 1733억 원, 근로자 학자금과 훈련비 대부에 889억 원, 검정수수료·교재비 등 지원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 수강 지원 등 근로자 능력개발훈련 지원에 749억 원, 근로자 학자금 지원에 100억 원,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지원에 775억 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을 위하여 9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에 169억 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비용에 14억 원, 노사 공동의 직업훈련 지원을 위하여 19억 원, 기타 기업인적자원개발 인중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부족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훈련입니다.

국가기간산업 등 우선선정직종 훈련 실시를 위하여 1196억 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382억 원, 다기능기술자 양성 등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에 1180억 원, 직업훈련교원 양성 등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352억 원, 성장동력산업의 중간기술인력 양성에 2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고용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87억 원, 직업능력개발 기관 및 과정 평가에 신규로 14억 원, 국제성인능력측정 프로젝트 참여 비용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495억 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34억 원, 여성·고령자 고용촉진 컨설팅 비용으로 20억 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용자에 43억 원, 고령자인재은행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고용 촉진 및 모성보호 지원입니다.

산전·후 휴가급여에 1436억 원, 육아휴직급여에 654억 원, 육아휴직장려금에 173억 원,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으로 3억 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에 103억 원, 공공보육시설 지원에 18억 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용자 등 여성 고용환경 개선 용자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2조 2147억 원, 취업촉진수당 지원에 3457억 원, 연장급여 지급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사업 운영 등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601억 원, 고용보험사업 운영에 473억 원, 고용보험료 과·오납 반환금에 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기금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최근 증가율 둔화 추세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7.5% 감액하고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강화 및 산재의료관리원 전문화·특화 지원과 산재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산재예방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수입은 보험료 4조 5965억 원, 재산수입 1525억 원, 경상이전수입 1454억 원, 용자금원금 회수 117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5억 원, 여유자금 회수 2조 4191억 원 등 7조 4687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1%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보험급여 3조 5228억, 근로복지공단 사업 2842억 원, 산업안전공단 사업 2647억 원, 산재예방 용자 958억 원 등을 지출하고 3조 1739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별 계획입니다.

보험급여 및 반환금 지급 사업으로 요양급여에 8001억 원, 휴업급여에 8067억 원, 장해급여에 1조 3111억 원, 유족급여에 3405억 원을 편성하였

으며 상병보상연금에 1806억 원, 장의비에 253억 원, 재활급여에 10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지원 등 재활사업에 474억 원,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에 77억 원, 산재의료관리원 지원에 308억 원, 대구재활전문병원 건립에 112억 원을 반영하고 산재보험 위탁운영 지원에 1329억 원,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등 사업 수행 경비에 418억 원, 근로복지공단연수원 건립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공단 사업입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에 1100억 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장 안전관리기술 지원에 140억 원, 사업장 보건관리기술 지원에 86억 원, 사업장 기술지도 대행 수수료 지원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에 180억 원, 안전보건 연구 개발 및 국제협력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재예방 운영 지원에 820억 원, 산재예방시설 건립에 105억 원,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용자사업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에 110억 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에 85억 원, 산재예방 시설자금 용자에 9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은 사업주부담금 984억 원, 가산금·변제금 1125억 원 등 4573억 원으로 금년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체당금 1809억 원, 무료법률구조지원 61억 원, 반환금 26억 원 등 1992억 원을 집행하고, 2581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당금 지급입니다.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18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금채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위하여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 주요 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수입은 사업주 납부 부담금 176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복권기금 전입금 84억 원, 융자 회수금 210억 원, 여유자금 회수 1175억 원 등 3534억 원으로 금년 대비 7.0%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용장려금 1121억 원, 공단출연금 963억 원, 융자금 115억 원 등 2293억 원을 집행하고, 여유자금으로 1241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별 계획으로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1121억 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 200억 원, 직업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 25억 원,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자금 융자에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에 20억 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에 94억 원,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에 28억 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고용조사·연구사업 지원에 26억 원, 고용정보관리사업에 26억 원, 인건비와 기타 사업운영비에 3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와 주요 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수입은 타계정 및 복권기금전입금 118억 원, 이자수입 122억 원, 융자금 회수 732억 원 등 273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0%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 773억 원, 신용보증사업 132억 원, 실업대책사업 314억 원 등 1219억 원을 지출하고, 1511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별 계획으로 중소기업사업을 위해 월 평균 17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에 340억 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에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52억 원,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지원에 19억 원,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용보증사업입니다. 근로자신용보증지원 대위 변제 사업에 98억 원, 신용보증지원 사업운영 지

원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사업입니다.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 지원에 14억 원, 실적여성가장 창업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금운용계획의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진훈**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1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매입규모 축소 등에 따른 기타 경상이전수입의 감소와 2008년도에는 청사매각 계획이 없어 2007년도에 편성되었던 건물 및 토지매각대 수입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상이전수입은 임차보증금 반환금을 제외하면 주로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와 반영이 필요하고 아울러 수입예산액의 증가보다는 회수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323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는 주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확충, 차별시정업무 도입 및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반환금 신설 등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 한국노총연수원 리모델링 지원 및 파독광부복지사업 신규 실시, 국가기술자격 통합 등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금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신규사업은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취업애로계층 직업진로개발 지원, 한국노총연수원 리모델링, 노동행정종합컨설팅, 파독광부 복지사업,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아시아 사

회적 대화 포럼 개최 등입니다.

먼저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에게 실업 발생에서 취업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청년층의 NEET화 방지 및 취업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일반회계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해외취업지원사업,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의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사업 등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연수원 리모델링사업은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의 리모델링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3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동 연수원에 대한 건물 신축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 시설보수비로 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이나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데 한국노총에만 이에 대해 계속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 등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노동운동의 정착을 위해서도 시설 유지·보수비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172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의 급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부족하게 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정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익형 사업보다는 시장에서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생존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인 수익형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적 일자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되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리스료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005년도부터 대학 공학관, 대학 기숙사 등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BTL)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BTL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운영비 등 정부지급금 소요액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BTL사업을 확대할 경우 이에 발생하는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이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시설관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자과건제도 개선사업입니다.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산업현장에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홍보, 과건사업 지도·점검 외에 우수과건업체를 인증하는 것으로 5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건업체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여 과건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운영방식이 대부분 사업별 수시모집형으로 운영되어 과건근로자는 항상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과건사업을 운영하고 과건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 과건업체를 정부에서 인증함으로써 과건업체의 대형화 및 건전화 유도하여 과건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건업체의 중간 착취 등 과건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 수시점검을 통한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며 우수 과건업체 인증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 사업은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고용상 성차별적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하는 것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상의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회성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녀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모성보호지원 사업은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고 출산 및 육아 등에 기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과 취업여성의 경력 단절현상을 방지하며 출산휴가비용의 사회 분담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의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소요액은 143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6.9% 수준인 1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성보호지원 사업은 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30일에 대하여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였으나 산전후 휴가비용의 사회분담 차원에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의 제도 도입 시 국회에서는 산전후휴가제도 운영 소요예산의 50%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도록 결의한 바 있으나 일반회계 지원규모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분담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의 사회분담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UR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농예상 농어민에 대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전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3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 및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신기술 등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다수의 실업자들이 취업 등 전업을 위한 훈련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와는 달리 사업내용이나

성격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미 FTA 타결 등 농어업 분야의 개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화하여 FTA 피해 농어민 등의 원활한 전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사업은 광업종사(석탄·철 등 8개 광업)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폐위로금 및 자녀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2008년도 예산액은 537억 1700만 원입니다.

산재보험 급여지급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근로자의 장애등급 판정 및 장애보상과 사망자에 대한 유족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는 노동부에서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통해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기관이 이원화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처리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민원인의 편의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2008년도 예산은 근로복지공단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을 일괄하여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각 중앙부처가 7개의 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입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부처의 제주도 이관사업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5억 5300만 원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이관사업인 고용정책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노사정책사업 등을 금년도 상반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2008회계연도 노동부 소관의 총규모는 20조 2643억 7000만 원입니다. 적립금·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순지출규모는 9조 59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보험의 적립금현황을 보면, 기금 전체 적립금 규모 면에서 감소추세이고, 지출액 대비 적립금 배수에 있어서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립금의 감소는 그간 누적되어 온 적립금에서 사업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적립금 규모의 변화 외에 지출액 대비 적립금 배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바,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경기불황과 실업발생에 대비한 적립금 축적이 필요하므로 현재는 기금재정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향후 정확한 추계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건전성 유지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여유자산 운용입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평균수익률은 고용보험 5.80%, 산재보험 8.34%로 양 기금 모두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주식형은 양호한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으나,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채권형의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식투자비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금년도 산재보험은 주식투자를 완료한 상황이나, 고용보험은 분기별 분산투자로 인해 4/4분기의 주식투자 예정금액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관리비입니다.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매입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경비로서 2008년 신규 매입 청사 24개소 이전경비와 전체 72개소의 청사관리비로 구성되어 있고, 113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운영비는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의 관리에 따르는 유지비용으로 2007년 이전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관리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던 것을 청사를 매입하면서 그 관리비용의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

다. 청사매입의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관리비 재원도 고용보험기금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예산은 청사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발간·전산장비 보강사업은 국가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시험 집행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발간·전산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한하여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기금지출 계획안에는 총 10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47개 종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의 통합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요재원으로 출제과정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 고객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희망자 및 피보험자인 재직자의 자격 취득을 통한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과 고용인프라 확충 등 일반회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애로계층 민간취업기관 지원 사업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모집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 공공 고용서비스와의 보완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의 명칭을 '취업애로계층 민간취업기관 지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100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여성고용지원센터 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의 고용지원센터에서 해야 하거나 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를 민간취업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가 지역고용정보서비스 제공의 허브(Hub)기능을 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고용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 청사를 매입하고, 그 규모를 대형화하였으며, 상담인력도 공무원으로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센터 내의 인력충원이나 기구 확장이

관란하여 고용지원센터 본연의 기능과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한다면 고용지원센터를 확장하고 전문화하려는 당초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사업 효과에 따라 사업 확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시설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원천이 되는 중간 기술자 양성 및 재직 교원에 대한 직종전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현장 혁신을 주도할 인력개발담당자에 대한 재교육 연수과정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 및 교육기본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95억 2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능력개발 교육시설이 재직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위주로 이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고등교육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기본교육시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연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선정직종 훈련은 국가기간·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 산업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합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으로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과 대한상의 위탁훈련으로 구성된 것으로 1196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선정직종 훈련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기계·장비 분야와 건설 분야,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 등이 대부분이나 실업자훈련과정과 중복되는 과정도 일부 있는 등 차별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국가 기간·전략 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실시기관 중 대한상공회의소는 다른 민간위탁 훈련기관과는 달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대한상의 소속의 8개 인력개발원은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의 위탁훈련 과정은 사업주단체로서의 특성을 살려 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향상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성훈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훈련기관과는 달리 2년의 장기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은 공공훈련기관인 대한상의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대한상의 위탁훈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대한상의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략 직종분야의 기능인력이 적기에 양성·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입니다.

보험사업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조 4687억 원입니다.

먼저 반환금은 사업주가 보험징수금을 과오납한 경우 그 잘못된 금액을 적기에 반환하여 주는 것입니다.

반환금의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반환금의 발생은 불가피하나 최근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당초 예산 대비 지출계획을 약 80% 이상 대폭적으로 증액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부분을 정확히 주지시켜 경영성과금 등 임금 제외 항목 포함에 따른 과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확정과납 혹은 확정정산 등에 의한 반환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보험료 신고·납부 업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착오 혹은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 발생을 줄이는 등 반환금 발생 유형별 원인을 사전 분석하여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등에 지출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57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료법률지원사업은 체불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사실 조사 후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의뢰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이

종료되면 무료법률구조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에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액소득근로자의 임금체불 경우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 중 장애인의 무고용률 2% 미이행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지급, 장애인 고용알선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 규모는 3533억 85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영업장소전대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하여 2006년까지는 장애인 기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7년에는 복권기금의 전입을 받아 전액 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는 복권기금의 재정악화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전년 대비 75%가 감소한 25억 원 규모로 장애인기금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가능 등록장애인 78만 명 중 실업장애인은 17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8만 명으로 실업장애인의 47%가 창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 사업을 통해 장애인 354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창업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0년도부터 공공기금으로 편입되어 2001년에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730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의 경우 중소기업계정, 신용보증계정 및 실업대책사업계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로또복권 판매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계정의 경

우 2004년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으로 수익금의 30% 중 6.195%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이후 이 계정의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신용보증사업으로의 기금전출이 어렵게 될 전망인바 이는 향후 중소기업계정의 재원조성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까지 지속되어 오다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중단된 일반회계 지원의 재개 등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근로복지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공공·기업·민간 근로복지를 연계하여 저임금근로자 및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영세사업장에게 사내복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기업복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려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기금지출계획안에는 16억 원이 새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복지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노동 부문에 있어서 근로자 생애주기를 반영하며 특히 근로가능기간 중 저임금·임금체불·실업·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의 복지수혜 범위와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반 포털사이트와 차별화하여 사업대상을 중소기업주나 일반 근로자가 아닌 취약근로계층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제종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홍준표** 말씀하십시오.

○제종길 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0월 17일부터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환경 분야 국감 중인 및 참고인을 일부는 통과시키고 일부는 8일, 9일만에 양 간사 간에 결정을 하여서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에 맞추려면 적어도 오늘 상

임위를 통과하여야 그때 참고인과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하사업에 대해서는 우원식 위원이 과학자 2명을 그다음에 안홍준 위원께서 세 분을 그리고 신명 위원께서 청계천에 관련해서 세 분 그리고 우원식 위원께서 남영동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 분인데 오전 중에 양 간사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홍준표** 양 간사분들의 합의는 두 분이 하십시오. 제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회라는 게 대부분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두 분께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나가셔서 소회의실에서 합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고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高義善 委員**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95년도 UR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농 예상 농어민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전업 및 재취업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취업률을 보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004년도에 762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18명, 2005년도에는 716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43명, 2006년도에는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직종에 취업했는지를 노동부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을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취업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노동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가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미 FTA 타결 이후 단기적으로 농어민 실업자 수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책연구소들이 한미 FTA 타결 이후 농업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1만 6000명의 실업자가 발생

한다고 하는데 노동부는 향후 5년간에 걸쳐서 3500명에 대한 실업자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FTA가 발효되면 당장 노동부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농촌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13만~14만 명의 농업종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농어민 실업자에 대한 노동부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장 극복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 취약계층의 취업률이 19.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취업률은 어느 분야나 낮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농촌·어업 분야에 대해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FTA가 체결되었을 때 농촌·어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렇지요?

○**高義善 委員** 예.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고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34만 명의 고용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경쟁의 조건이 미약하기 때문에 고용 감소가 예상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어촌 부분도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사실 고용 감소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특히 여러 가지 생산성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해서 분석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다 정확한 계량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高義善 委員** 농수축산 쪽은 말이지요 한미 FTA 체결이 끝나면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큰 수의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노동부하고 정부 공히 지금 5년 동안에 3500명 정도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축소된 것 같아요. 좀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참작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高義善 委員** 다음은 종합직업체험관 신축사업비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직업체험관 신축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도까지 총 2127억 원을 투자해서 전시관을 짓는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08년도 지출계획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전시물제작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모두 196억 원인데 이 계획은 올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전 단계인 전시체험 분야 설계 현상공모가 오는 10월 15일에야 완료될 뿐만 아니라 설령 설계 현상공모가 끝나 기본설계에 착수하더라도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시물 제작설치에 착수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시관이 건축되지도 않고 또 전시관 개장이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전시체험물 제작비로 122억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적절한 기금운용계획인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청소년 직업체험을 위해서 종합직업체험관은 정말 빨리 신축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부지 매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 경기를 벌여서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 11월쯤 되면 기본설계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요 하반기에 실시설계와 제작설치를 일괄해서 발주해서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제작설치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집행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와 제작설치비의 일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615억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122억 9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高義善 委員** 좋습니다, 빨리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월달까지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촉박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실시설계와 전시물 제작사업 발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금만을 편성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존경하는 고희선 위원님의 말씀이 저희들은 옳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기준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나 하는 의미에서는 총액이 615억이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122억 원을 갖다가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준표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高義善 委員** 예,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지출 계획은 정부의 지침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에 배포한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등은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 계상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에 3개 비목을 동시 계상해야 될 만큼 이 사업이 긴급한 것인지 또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지출계획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단일한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체험관이 운영되기 시작하는 2011년 한 해 동안의 체험관 운영비만 해도 약 229억 1500만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10년 동안 운영할 경우 10년간 운영비가 총 사업비를 초과하게 됩니다. 만일 체험관이 제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매년 적지 않은 규모로 지출되는 운영비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도 AHP 값이 보통 0.53으로 나왔거든요. BC로 분석해 보면 1에 미치지 못하는 0.84로 나온 바도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지난 2004년에 나왔다고는 하나 전시체험시설 구성방안이 올해 4월 12일에 확정된 만큼 사업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향후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등은 특별한 긴급성 등 사유가 없는 한 두 가지 이상 비목에 동시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내년에 기본설계만 해 놓고 실시설계비가 만일에 계상되지 않으면 사업이 6개월 정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감리비가 들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공사감리비는 설계단계에서의 감리비이지 시공단계에서 말하는 책임감리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 3단계 비목을 전부 다 계상한 것은 아니고 2단계 비목을 계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늘어지게 되면 공사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예산에 적정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高義善 委員** 위원장님, 오후 추가질문 안 하고 잠깐 한 가지, 한 3분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안흥준** 예, 추가질의……

○**高義善 委員** 대한상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수원상공회의소에서 한 15년 동안 위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약 220억 정도의 감소 요인이 발생했더라고요. 물론 운용을 하다 보니까는…… 교육을 시키다 보면 건물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전국 요소요소에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컴퓨터 장비 또는 교육시설 등등을 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한상의 쪽에서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한상의하고 조율을 좀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은 대한상의에서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좀 해주시기를 장관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위원장대리 안흥준** 고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중앙노동위원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기간제법 시행령이 7월 1일부로 발효를 하고 차별시정업무가 시작이 됐지요?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예.

○**단병호 위원** 기간제법을 보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을 한 10명 내외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현재 차별시정과 관련돼 가지고 12건이 접수되어 있지요?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위촉돼 있습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아직 없습니다.

○**단병호 위원** 한 사람도 아직 안 돼 있지요?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차별 시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제도가 처음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문위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난 6월 임시국회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예산 조차 올해 확보를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뭐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저희 위원회가 지난 6월 18일 기간제법 시행령이 제정된 후에—직후입니다—7월쯤 되는데 전문위원 5명에 대해서 인건비 약 2억 28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기본 방침상 기본경비 증가율 동결 방침이 있어서 전액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법령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 문제 아닙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이런 차별 시정 문제인데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될 전문위원 위촉에 대한 이

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차별 시정에 대한 원활한 업무를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올해 이렇게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2008년도, 내년도에 전문위원 없이 차별시정위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12건이지만 앞으로는 차별 시정 요청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중앙노동위에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저희들도 법령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명은 다 안 되더라도 우선 몇 명이라도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제안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장관이 한 말씀 드릴까요?

○단병호 위원 예.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중노위에서는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루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산편성 기본방침상 기본경비 증가율은 동결돼야 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본 예산 심의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예,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도 예산소위에 들어가 계시지요?

○한선교 위원 예.

○단병호 위원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가지고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전체 다 빠져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예, 감사합니다.

○단병호 위원 장관님,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올해 6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일용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이 신설이 되고 예산이 약 한 29억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저는 노동부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적극 편성한 데 대해서는 참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건설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제도를 설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장 노사협조가 필수적이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특히 건교부 등 관계부처하고도 아주 심도 높은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소위 십장제도라고 하는 불법적으로 이뤄지던 이런 하도급 구조를 폐지하고 실제 건설업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홍보사업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당장 검토가 가능할지, 아니면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지원은 동절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동절기에만 못 하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

가 이런 하절기에도 여러 가지 기후조건으로 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합시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 보면 근로조건 보호 및 홍보사업이 총 4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선 노동관서에서 사용할 생체지문인식기 구입 예산으로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거는 장비구입 예산이지 근로조건 보호 및 홍보사업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예산인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오히려 노동행정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항목을 조정해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장관님 의견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예산소위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근로조건 보호의 문제인데 장비구입 문제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장비도 근로조건 보호 그런 거보다는 일반 어떤 노사지원이라든가 산업안전이라든가 모든 수사업무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행정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예산 항목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대신에 거기에 편성돼 있는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최저임금 문제도 내년부터 적용률이 한 13.8%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훨씬 늘어나고 또 감시·단속직 노동자 문제라든가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같은 경우도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근로자들에게 또 사용자들에게 올바르게 홍보돼야 될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교육사업에 이 예산 1억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이거는 항목 조정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고맙습니다.

고용보험기금 또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현행의 고용보험료율이 0.9%,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한 10% 정도 인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익잉여금 규모 또 순수 고용보험료 수입 증가,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기준으로 할 때도 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 35% 수준에 머무는 부정이득·부당이득 징수, 20%에 머무는 연체료 징수율, 매년 3000억 원을 웃도는 고용보험료 미수납액, 400억을 웃도는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근로자 0.45%, 사업주 0.45%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현재 잉여금이 절대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액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요율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잉여금이 생기지 않고 거의 균형 상태로 세출 세입이 되는 거 같아서 이 문제를 손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냥 단칼에 내리겠다 이런 말씀하실 수는 없는 입장인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국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률 이거는 제가 해도 다 하겠더라고요, 비전문가인 제가 앉아 있어도. 전체 자산 운용 현황 보면 가중평균수익률이 4.5%에 불과하다, 06년도 국고 3년채 연간 시장평균 금리가 4.83%, 더블에이 마이너스 회사채 3년짜

리가 5.17% 또 1년짜리 동안채도 4.67%, 그런데 우리 수익률은 4.5%, 그러면 이게 무슨 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 등이 사실상 사업성기금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 언제나 변화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장기투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대체투자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한번 수익을 올려 보자 해서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21.2%가 증가가 됐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좀더…… 공격적이라는 것이 언제나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과감한 어떤 운용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보다는 적어도 한 2%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 이상수 작년에 비해서 아마 금년에는 그 정도는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게 운용하고 장기적 투자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운용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용 실패, 성공에 대한 책임도 물론 지워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려고 안정적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성공했다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한선교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누적결손이 2조 4200억 원, 수익증권 평가이익도 05년 대비 69.4%가 준 95억 원, 이거 06년 운용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률도 이것도 똑같아요, 4.5%예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산재보험기금은 사실 여러 가지로 현재 적자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건강보험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때도 보험료율을 약간 높이면서 요양료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약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은 저희들이 견지하고 있으면서 과연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검토 중

에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올해 여유자금 규모가 3조 1700억 원, 그러니까 58.2%가 증가했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체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누적미수금만 6500억 원, 매년 한 600억 원 내외 결손처리, 연체료에 대한 목표 33%로 저는 알고 있는데……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미수납액이 3960억 정도 됩니다.

○한선교 위원 누적……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한선교 위원 그리고요? 아무튼 연체료에 대한 목표가 33%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한선교 위원 이것 어떻게 높일 방법이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체납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별로 체납총액상한제를 실시해서 체납액 증가를 억제하고 있고요, 또 체납보험료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체납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납률이 04년에는 한 84%, 05년에는 88%, 06년에는 89.4%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07년 7월 현재까지 수납률 추이를 감안할 때 아마 91%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독려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이것은 높여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소위에서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한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자격 통합…… 출제·발간·전산장비를 보강하느라고 102억 원 예산액 책정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국가자격통합관리, 자격시험을 통합 관리하면서 노동부가 각 부처에 있는 자격시험들에 대해서 출제 시행 체점을 담당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우원식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용보험기금인데 이것 가지고, 세무사·변리사·관세사·수의사 시험을 출제하고 시행하는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쓰는 것이 적당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출제나 발간·전산장비 보장은 내년에 국가자격통합을 계기로 기존의 노후화된 인쇄 및 전산장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변리사·세무사·관세사·수의사 이런 자격시험을 출제하고 시행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갖다 쓰는 게 맞느냐 이것이지요.

이게 말이에요, 제가 죽 살펴보니깐 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 4년 동안 시험 보면서 난 이득이 한 98억 정도가 있는데 이 흑자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단 일반회계 그리고 타 사업 부문의 경상운영비로 갖다 썼어요. 이것은 사실 국고에서 써야 될 것인데, 국고를 줄여 주기 위해서 시험에서 난 이익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쓰면서 자격통합이라는 이유로 이런 변리사·수의사 시험 문제를 내는 것까지 고용보험으로 갖다 쓰는 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취지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홍준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출제 시행 채점 등 검정 집행과 시설 등의 예산은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제나 전산장비 보장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검정통합을 계기로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인쇄·전산장비 같은 것은 고용보험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법안소위원장 할 때 고용보험법 첫 개정할 게 이건데요, 그때도 일반회계를 써야 되는 것을 기금에서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성 때문에 그리고 국고의 부족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 준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거든요. 시험에서 난 이득은 국고를 감소하기 위해서 기관의 경상운영비로 쓰고 또 그 시험, 고용보험기금으로 해야 될 성격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험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갖다 쓴다 이것은 기금 운용상 옳지 않지요. 국고로 갖다 쓰는 것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법 개정할 때도 불가피할 경우에 쓰라고 한 거지 이렇게 기금을 아무 데나 갖다 쓰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국가자격시험 통합 이전에 타 부처에서 관리한 것을 봐도 타 부처 관리 검정시험의 경비 조달 방식은 시험 응시수수료에다가 정부예산 지원금 가지고 대개 다 했어요. 그것을 모아 가지고 노동부에서 관장하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쓰겠다,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기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기 내역을 보니까 시간당 4만 매 이상 찍는 운전기예요. 그런데 자격시험 다 모아진 게 47개인데 그중에 4만 명이 넘는 자격시험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격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고용보험법 만들 때 위원장께서도 특별히 결의문까지 만들어서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데 시급성 때문에 인정해 주니 가급적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해라’ 이게 그때 법 개정해 주면서 걱정이 들어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전체회의에서 결의문까지 만들어서 한 건데……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세무사 변리사 수의사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비용을 갖다 쓰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은 기관의 경상운영비로 쓰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최신식 운전기를 쓰면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시간당 4만 매 이상 찍는 운전기는…… 4만 명 이상 시험 보는 게 47개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서, 2005년도에 결의안까지 채택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출제·발간시설 확충은 189억인데 일반예산에 반영했고요, 또 국가기술자격 현장성 및 통용성 강화를 위해서 62억을 계상하면서 그것도 역시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단지 기존의 노후시설을 갖다가 보완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시급성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고용보험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하여튼 그것은 예산소위에서 다시 또 다루겠습니다.

산재예방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사분규에 의한 근로손실일수가 1년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120만 일이었고요, 금년 경우는 9월 말 현재 41만 일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120만 일 되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우원식 위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7160만 정도 됩니다.

○**우원식 위원**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노사분규에 의한 근로손실일수에 비해서 한 70배 정도 많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 59배 정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우원식 위원** 한 60배 70배 이렇게 되는데요, 교통사고하고 비교를 해 봐도 산업재해 통계가 근로자 1만 명당 77명이고, 사망자는 10만 명당 21명인데요. 교통사고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72명, 10만 명당 13명, 수치상으로 볼 때는 교통사고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노사분규에 의한 근로손실일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화들짝 놀라서 긴급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0배 많은 산업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하면 92억 투자하고 있어요. 전체 산업재해예방사업을 보면 3635억인데요, 여기에서 3540억은 기업에서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2억 내고요.

산업재해에 의한 직접손실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직접손실액은……

○**우원식 위원** 3조가 넘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3조 2000쯤 됩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 1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사분규에 의한 근로손실일수보다 한 60, 70배가 많고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부의 예산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국감 때 계속 할 텐데요. 그것에 비해서도 더 피해가 큰 산재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 손실액이 15조 정도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예산은 90억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기업의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고요. 산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도 일반회계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우리가 노사분규에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매우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따지고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산재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위원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최소한 이런 통계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부에서라도 이런 산재사고의 심각성에 따른 정부 의지의 표현 그리고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산재 담당하시는 국장 누구세요?

그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이런 통계 수치에 따른 노동부의 산재에 대한 의지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직무대리 김병욱** 김병욱입니다.

지금 정부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마는 앞으로도 최대한……

○**우원식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의원회관에서 산업안전도구에 대한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노동부가 너무 안 해요, 산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지금 우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로자고용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고용보험을 국가자격시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관

님, 이것 예산 전용이라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위원님 지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 부분…… 우원식 위원님, 소위원이지요?

○우원식 위원 예.

○위원장 홍준표 철저히 좀 따져 주실 것을 부탁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 위원 이번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YES 프로그램에 대해서 42억 원을 처음으로 계상했는데, YES 프로그램이 뭐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마디로 YES 프로그램은 취업 애로 청년들에게 진로지도에서 취업알선까지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재 위원 이 사업은 영국의 청년뉴딜프로그램 또 경기도청에서 2005년부터 실시한 경기청년뉴딜사업을 벤치마킹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현재 46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3000명 규모로 시범실시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경인권을 살펴보면 취업률이 26.5%, 평택 김해진주 대구 춘천 태백 영월 등 도시는 취업률이 0%입니다.

이게 YES 프로그램이 아니라 NO(No Occupation)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모양은 좋고 의도는 좋지만 실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40여억 원 지원까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저희들은 우선 취업률보다는 참여 인원수를 높이자 이런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 취업률이 21%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더불어서 전담인력의 확대와 지정 또 유관기업과 협조 및 관련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연계 등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매뉴얼도 발간하고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경재 위원 이러한 의미에서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취업률은 2005년에 64%, 2006년에 65%였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통계만 보면 노동부가 전문적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아직 시행이 일천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관리사나 이런 것을 뒤 가지고 해야지 지금 고용센터에서 부가사업으로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러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오늘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청사관리 명목으로 114억 원이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48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액수도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오면서 135%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 사업도 기금으로 이관돼서 1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온 사업이 2006년 이후에만 10개 사업에 436억 원입니다.

또 이 기금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전보다 사업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예산과 기금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예산에서…… 고용기금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적당히 해서 넘기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일반회계 사업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보험 적용대상을 주된 수혜자로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으로서 고용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이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국회 예산권을 벗어나서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재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고용기금에 이것을 전부 몰아넣어 가지고 또 그것도 일반회계에서는 어느 규모로 하다가 고용기금으로 나가면서 두 배 세 배로 막 올리고 그래 가지고 너무 낭비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저희 노동부의 애로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고용보험기금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일반예산에 많은 부분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당국이 자꾸만 고용보험으로 쓰라고 하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경재 위원** 노동부 생각이 아니고 예산처 생각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산처에서는 가능하면 고용보험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항목들을 많이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경재 위원**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련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개의 사업 130억, 고용보험기금에 2개 사업 8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이었으나 영세사업주 부담을 고려해서 작년 1월부터 임의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0% 미만이라는 데 맞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이경재 위원** 고용보험기금 79억 원이 계상된 외국인지원센터 사업을 보면 대부분 상담 고충처리 등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편성하다가 복지기금의 재원이 줄자 올해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말을 바꿔 댔어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이경재 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금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를 편성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 복지기금에서 지원됐는데 06년 5월에 중단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으려 했지만 이 문제도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서 고용촉진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쓰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다음에 복지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 근로자 복지진흥기금에서 실업대책사업은 동 기금의 3대 주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의 19억 원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영업 창업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두 기금상의 창업지원사업이 장기 실직자 및 여성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의해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98년 IMF 이후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이뤄진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신규 지원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종료 시까지 재교육 및 재계약 등 사후관리방안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고용보험기금에 의해서 창업지원사업은 새롭게 일괄 다루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같은 데도 하나는 복지진흥기금으로 쓰고 또 고용보험기금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성격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고 확실하게 통합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금년까지로 끝냈고요,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은 전부 다 모아서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경재 위원** 영유아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52억을 지원할 때 이것도 역시 고용보험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운영비 편성 시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 지원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매각 이양 등의 검토가 불가피한 바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복지기금이 2002년 이후에 연간 38%씩 사업규모가 계속 축소되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복권수입 감소, 차입금 상환 이런 것 때문에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기금평가에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지적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회의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준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기남 위원 예, 하려는데……

○위원장 홍준표 서면질의하고 가지지, 간단하게……

○신기남 위원 간단하게…… 데뷔전을 치러야지요.

○위원장 홍준표 신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남 위원 신기남입니다.

노동부 소관 신규사업 예산 규모가 11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에 42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한국노총연수원 리모델링에 3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YES라는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 중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통합해서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사업이 청년실업 해소라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기존의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YES 사업은 이른바 NEET족 등 별로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을 주로 상대로 해서 구직의사를 갖도록 하고 직업지도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런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신기남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면 1단계에만 경비를 지급하더군요, 사업계획이. 1단계 수료 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 3단계 참가자들이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보통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로 넘어갈 때는 기존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의해서 지급이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기남 위원 한번 1단계 받으면 계속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대부분 한 사람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지도를 받아 가면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기남 위원 그다음에 한국노총연수원 리모델링 30억, 다른 노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동조합의 자율성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지만 현재 한국노총의 실정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왔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민주노총도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하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아예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민주노총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원했었지요, 임차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그런데 최근에는 지원을 받으면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받고 감사를 받기는 싫다’ 해서, 조건 없이 주면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상 조건 없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신기남 위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신기남 위원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출연할 예산액이 144억, 금년도보다 조금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일원화가 돼서 외국인근로자가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운용과 지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14억, 고용보험기금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동일한데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분산 수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을 약간 구분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성격이나 관련법의 취지 또는 재원조달 방법 등을 감안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일부 재정적인 부담을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재원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예, 그런가요.

그다음 한국어능력시험사업비, 많이 증가되어서 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대행기관으로 한글학회와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있는데 시험 과정에서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일 대행기관으로 됐는데 앞으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었습니다.

한글학회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은 금년까지만 시험 대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전부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우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험제도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한다든지요. 또 시험료도 아주 낮추어서 과거에 30불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10불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밖에 시험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접수방법도 상당히 합리화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완전히 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이번에 많이 개편했습니다.

○신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채류지원사업, 귀국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증가가 됐는데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라서 고용채류지원사업이라든지 귀국지원비는 확대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적정하게 계상된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 말씀처럼 만일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더욱 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기남 위원 그런데 적정하게 계상된 것인가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예,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상건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근로자파견제도 개선예산 이게 조금 증액된 5억 3800,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비율은 많이 늘었습니다.

근로자파견제도 개선예산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홍보, 지도 점검 이런 데 쓸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파견제도를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개선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지금 간접고용의 형태로서 도급과 파견이 있는데 저희들은 도급보다는 파견을 장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급근로자보다는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훨씬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견법을 개정할 때부터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서 파견의 범위를 넓히려 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루지 못했구요. 그래서 대신 시행령에서 파견의 범위를 일정한하게 넓혔고요.

앞으로 파견제도가 정착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외주화 또 심지어는 위장도급 이런 것이 없어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조건도 향상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신기남 위원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량해고사태, 이랜드 같이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정논의와는 별개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까만 소관 부처인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립니다. 온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신기남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홍준 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비 편성을 보면 일반회계 9323억 300만 원 중 인건비에 쓴 경비가 2255억 8900만 원으로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노동부의 인건비성 경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04년 16.5%에서 2008년 24.2%로 거의 50%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2008년도에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으로 인건비 편성이 증가하지만 작은 정부를 표방해 온 참여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깨 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는 크게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온당할 수 있지만 특정한 부분은 큰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행정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해서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어야겠지만 서비스,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려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는 그동안에 인력을 좀 늘렸고 노동위원회도 인력을 늘렸고요. 특히 금년에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을 공무원화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늘어나도 국가 전체로 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홍준 위원** 고용평등실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사업의 2008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23.1%가 증가한 8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의무기업의 여성근로자 현황은 여성 비율이 평균 30.7%고 민간기업이 31.6, 정부투자기관 12.5%, 산하기관이 31.9%입니다. 관리직 여성 비율의 평균은 9.3%이고 민간기업 10.3, 정부투자기관 1.2%, 산하기관 4.5%로 민간기업에 비해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여성고용 비율 및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업무성격상 기간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해당 직종의 여성 전공자가 부족하고 또 민간기관에 비해서 인력운용의 유연성이 낮아서 채용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인 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해서 공기업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공공기관의 여성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서 공기업의 여성고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양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을 보면 실효성이 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 사업 대상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6개 청 위주로 수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사업을 앞으로 46개 지청으로 확대해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인데요, 새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CEO와 노동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나간다면 질적으로도 여성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대상 기관이나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유인책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증액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200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7%가 증가한 172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투자재단은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재단사업 예산을 노동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회투자재단은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 예정인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나 또는 시설비·운영비·용자 지원 등의 사업은 노동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재단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런 점에서……

○**안홍준 위원** 지금 재단이 설립이 아직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사업을 노동부 예산에 지금 편성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마 11월에 설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관계부처인 복지부의 경우도 사회투자 인프라 지원 명목으로 60억 원을 2008년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재단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관 부처인 노동부가 수행하면 될 것을 기획예산처 주도의 비영리법인을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상수** 금년 11월에 재단이 설립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안홍준 위원** 노동부가 수행하면 될 것인데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주도해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것이 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부처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습니다.

○**안홍준 위원** 노동부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이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미 FTA 고용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노동부가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한미 FTA 고용대책 중에는 주요 제도가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훈련바우처제도, 훈련연금급여 등 4개 제도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고 전직서비스 민간위탁제도, 훈련과정공모제, FTA 신속지원팀,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등 4개 제도는 신규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에서는 FTA와 관련해서 8개 주요 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업들은 FTA 체결로 인한 특별대책이 아니라 평소에도 시행해야 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FTA가 체결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용정책을 펴 왔고 특히 적극적인 시장 개입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현재의 정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예산은 더욱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금년 예산을 한 8.4% 증액해서 내년에는 2조……

○**안홍준 위원** 예산 문제는 제가 다음에 질의할 건데 아마 질의 내용을 먼저 알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고요,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증액하겠다 그렇게 해서 증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예산이 아마 많이 소요될 것인데 예산 마련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안홍준 위원**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 중 농어민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은 FTA농어업특별법에 의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고용보험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고용보험기금 적립 주체도 아닌 농어민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고용보험기금은 농어민이 아니고 사업주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고용촉진장려금과 성격이 비슷해서 기금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홍준 위원** 구체적으로 고용대책의 고용지원 이동센터 설치 운영, 해외취업 지원체계 확충,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정부 지원 일자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이 신규로 순증되었습니다.

이 중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사업에 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사

업에서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안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정보원에서 사업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잘해 왔다면 중장기 전망 사업이 필요 없든지 둘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금년도에 수급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는데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정치한 인력수급 예측모델 개발과 산업 부문별 또 여성·중장년 등 특성별 단기 인력수급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서 더욱 더 정치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안흥준 위원** 지금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다 만들어 와서 읽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 혼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흥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래 위원** 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고를 좀 털어드리는 의미에서 차관님께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감사합니다.

○**조성래 위원** 우선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것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래 위원** 그리고 예산도 지금 잡아놓은 것은 한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07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60% 가량 늘어났는데 금년도 집행을 해 보니까 워낙 많이 나가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조성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 지금 이 대상 인력에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인력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런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전문인력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전문직업인력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무슨 조언을 받는다면 몰라도 이 사람들을 꼭 장려금을 지원해 가면서 인력 확보를 도모해야 되는가 하

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쓸 돈 같으면 차라리 제품기술 개발자, 기술사, 기능장, 마케팅 전문가, 이런 기술과 마케팅 관련 전문가로 한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꼭 필요한 사람은 기업에서 스스로 고용을 하는 것이 실정인데 중소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면서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정부 재정을 이용하는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 이 제도를 나쁘게 이용하는 폐단을 없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위원님 취지에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해당 업계하고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예로 드는 변호사라든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을 중소기업이 직접 고용까지 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성래 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노동부차관 노민기**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자문을 구하면 될 일이지 직접 고용하기까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이 직종을 노동부장관 고시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고시 개정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필요한 사람을 정부가 지원, 돈을 주는 거 아니냐, 저희들 용어로는 그것을 사중손실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탐은 나지만 고용을 하기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임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퇴직자라든가 하는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데 조금 유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고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중

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뒤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은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중손실효과는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성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층을 위한 잡카페 이것을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6개소에 예산을 지금 54억 원을 배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조성래 위원** 그런데 이게 좀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노동부에서 취업애로계층지원사업으로 공단지역에 고용지원센터 10곳 만드는 데 6억 원 예산 배정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FTA 피해 근로자 전직지원사업, 한 500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16억 원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이고 사업 효과도 다소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잡카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FTA 피해 근로자 지원사업이라든가 취업애로계층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비용보다 몇 배나 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이런 예산 투입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잡카페사업을 전액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시범운영한 뒤에 그 결과를 봐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저희 고용지원센터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시범사업 등을 금년 하반기부터 일정 센터들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업들과의 예산편성 문제는 아마 내년도에 6개소가, 외부에 저희들이 그 공간을 임차를 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있어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정부가 강조해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 실업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청년층이 좀더 빨리,

직업 정보 또 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빨리 그리고 쉽게 갖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학에도 지원하고 센터에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청년들 밀집지역에 이와 같이 편안한 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직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비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업진로지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하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일정 부분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어떤 방식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 이것을 비교형량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래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5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노동부차관 노민기** 일정 부분 공간 임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초기사업에…… 그리고 또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변화가거든요. 예를 들면 노량진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초기에 그 정도 돈이 아니면 카페를 열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래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뜻입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청년층 밀집지역은 다 임차료가 비싼 곳입니다.

○**조성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질문 안 되는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의 민간기관 교육 위탁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근로감독관 정원이 1672명이고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을 빼면 1325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노동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 역량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은 근로감독관이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효과, 학습시간이 10여 시간이라고 하든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법률관계, 절차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다음에 실체법 관계 이런 법률지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갈등관리나 노사관계론이라고 할

까 이런 전문적인 지식도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교육 인원도 1년에 24명에 불과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로감독관의 민간 위탁 교육은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도 교육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증액하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1주 2주 이런 단시간 교육밖에 못 했는데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내년도에는 6개월짜리, 이렇게 상당히 긴 교육을 민간 대학원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을 예산당국에서 반영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급·7급 공무원에 대해서 6개월씩 대학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별도의 전문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간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반영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 욕심 같아서 더 늘리고 싶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만큼 일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차출했을 때 남은 사람들의 일감이 더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24명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한번 해 보고 성과가 나면서 조금씩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래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차관 답변이 더 졸린다, 장관님 답변보다. 어떻게 차관이 그렇게 패기가 없어서야 노동부 되겠어요? 답변을 좀 명료하고 간략하고 핵심 있게 해야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나게 한번……

○**신명 위원** 신명입니다.

신명나게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중복되는 것을 피한 범위 내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되는 예산이 20%, 156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신명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경우는 응시율로 봐도 응시생이 한 260% 되고 취업률도 한 80%가 되는 우수훈련원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가 직접 훈련원을 만든 것이 아니고 노동부가 지어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폴리텍대학과 비교해 보면 사실 관리주체만 다를 뿐이지 훈련기간이라든지 대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저희들이 직업훈련교육을 강조하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 기구가 많이 위탁을 받아서 교육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노사가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 상공회의소나 노사발전재단 같은 데서 앞으로 교육을 많이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예산이 적게 계상됐지만 앞으로 더욱더 상공회의소나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업훈련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입니다.

○**신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 하나하고 장관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까마는 특히 남북경협을 앞두고 나서 기능인력의 예상 수요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주공단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임진강 개발 문제도 있고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기능인력의 부족 문제가 앞에 떨어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

비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존경하는 신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사나 민간인이 보충적으로 많은 훈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장려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명 위원 그러시다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특히 사업주 단체는 이번 경험과 관련돼 가지고 국가가 직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를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마 상공회의소의 예산이 감축된 것은 양성훈련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향상훈련 교육을 좀 강화시켜라 이런 의미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만일에 위원회에서 예산 감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증액시켜 준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신명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다 그런 의견을 제가 같이 넘기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히 민간훈련원 측에서 이번 경험과 관련돼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알겠습니다.

○신명 위원 다음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복지사회의 1번이 아닌가, 특히 일은 통한, 일자리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중에서 가장 큰 복지는 우리가 보통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또 자기 집을 가져서 세금을 내고 또 저축을 해서 금융소득세, 세 가지 세금만 내면 가장 큰 복지가 그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여기하고 관련돼서 봤을 적에는 장애인축진공단의 주 사업비가 사업주가 부담하는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장관님 아시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신명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은 거의 외면하고 있지 않나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지금 일반회계에 배정해서, 금년에도 200억인가요? 그것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크게 봤을 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많이 고용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고용하지 말라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복지도 일을 통한 복지가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정말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시설이 미비해서, 축진공단의 기금이 최근에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데 계속 요청하지만 안 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일반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 위원 지금 최소한, 폴리텍대학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1265억이 지정되니까 경상업무비의 1.5배 정도 일반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공단의 경우를 보면 경상업무비가 386억인데 2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니까 이것도 제가 증액하는 방향으로 일단 소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 고용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분담금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일반훈련, 결국은 비장애인에 대한 훈련은 국가가 내거나 고용보험에서 부담을 하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신명 위원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는 의무비용에서 부담을 한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국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소위에다가 제가 의견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신명 위원** 모성보호비용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제도를 신설할 때는 장관님께서 2001년도에 법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을 도와주셔서 쉽게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 장관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30일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당시 제가 많이 도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신명 위원** 제일 힘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 번 힘이 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금 90일을 지원하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신명 위원** 그런데 대기업을의 경우는 30일분, 결국은 60일분은 기업주 부담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해서 60일을 더 추가한다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 80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명 위원** 지금 전체 고용보험 예산으로 봤을 때는 800억 정도 더 쓰신다고 문제가 많이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고용보험에서도 물론 지급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좀 정부 내에서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명 위원** 국민건강보험은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부터 사실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재직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것은 어려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일반여성하고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본다고 그런다면 사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된 것이고 그것보다도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면 더 투자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건

강보험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성 일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재직 근로자 여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견해도 저는 일용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 위원**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없이 한두 가지만 더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예, 하십시오.

○**신명 위원** 제가 긴 저기보다도 서면질의로 몇 가지만 하겠다는 말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위원장 홍준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일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동부에 한정된 것은 아닌데 일자리 사업 이게 국민들은 노동부가 주무부서로 인식하고 있고 실질적 내용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한 6조 4000억 들어갔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을 또 계속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2008년도에. 이것 평가 좀 해 봤습니까? 그동안 투자된 돈 대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평가 좀 해 봤습니까? 국가 차원에서든 아니면 노동부 차원이든.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배일도 위원** 아니, 취업애로계층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이 정부 핵심적인 요체로 해서 전부 한 6조 4000억 들어갔거든요. 금년도에도 1조 2900억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노동부 예산도 이 안에 들어 있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고용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배일도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관 이기권** 고용정책관입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매년 3분의 1씩 그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사업이 끝났잖아요, 홈페이지도 다 폐쇄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서 지금 공식적으로 작성된 것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를 넘겨주세요.
예?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관 이기권** 사람입
국일자리위원회는……

○**배일도 위원** 지금 신규사업을 이렇게…… 여
기 보세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조사부터 해서 건
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해 가지고 얼른 들으면
건설근로자한테 계속 고용 돈을 주니까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검토되지 않으면 돈
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은 양극화 심화나 아니
면 취약계층이 더 확대되는 현상으로 빚어지니까
요, 저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봐서 우선 평가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대로 되지 않았으면 안
된 대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참고로 저쪽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라는 방글라데시 안 있습니까? 못
사는 나라인데 인구가 한 1억 2000 되지요. 그런
데 노벨평화상 작년에 탔던 무하마드 유누스 총
재 있거든요, 그라민은행. 거기에서 보니까 최소
한도 사람이 태어나서 세 끼 밥 먹고 그다음에
비새지 않는 집에서 자고 그리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 잘 못
하니까 그라민은행에서 은행을 설립해 가지고 소
위 소액대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수혜
자가 한 1500만 명, 1500만 명이에요. 이 핵심요
체는 뭐냐 하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나
뭘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서 갚도록 이렇게 만드는 대출제
도인데요. 담보와 보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 가
지고 결국은 극빈에서 탈출한 사례들도 세계적으
로 전파되고 있는데……

1조라는 돈이면 1000억짜리 공장을 10개를 지
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6조 4000억이면 64개의
1000억짜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기
자본금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보통 다른 돈까지
투자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회 양극화는 심화
되고 저소득계층은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평가가 있고 예산에 반영해야 국
민이 피부로 느끼는, 저는 이후의 일자리 사업이
그것이 사회적이라고 이름이 붙든 아니면 취약계
층지원제도라고 붙든 그런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

씀드린 것이니까 그 예산 편성은 기 되어 있고
요, 국회의 권한은 예산 삭감권밖에 없는데 저는
이 예산을 싹 삭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
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
고 무책임한 제안일 것 같아서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고 이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편성됐더라고
하려면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
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획예산처에서도 성과를 측정해 가지
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그 다음해에 예산을 줄이
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배일도 위원** 제 보좌관이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실패사례를 이렇게 쫓다고요. 그
것 다 하려면 되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보니까 많
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아침에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차별시정위원회 기간
제법,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파
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또는 입법
이 되면서 핵심요체가 비정규직법이라고 해서 다
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하나는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계
속, 기간제 단시간 사용하다가 2년 되면 그 다음
부터는, 2년 전까지는 자유스럽게 사용하고 2년
후에는 좀 정규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
업장 내에서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차별시정위원
회 절차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 테니 그것을 통해
서 그런 문제를 시정해 봐라 이런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 핵심요체로 중앙노동위에서
담당하게 된 게 차별시정위원회 아니겠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위원회 다섯 사람 월급을 주니
못 주니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한
기본경비를 동결하자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
렇다, 이런 얘기였다는 말이지요? 예?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배일도 위원** 자, 그런데 이게 기본경비 동결
입니까? 신규사업 아니에요? 법이 새로 통과되고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사업명이 새로 설정되었는데…… 저는 장관님께서 설득력이 없으시거나 논리를 안 가지고 계셔서 국무회의에서 설득 못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국가의 의지 또는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10명 가지고 차별시정위원회가 된다고 본다면 저는 년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당장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차별시정제도를 여러 가지로 마련하면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을 많이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일단 이번에 새로 채용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극복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기존에 들어온 공무원들, 뭐 사실 거기에는 경력직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문제 되지요. 그 업무도 안 되고 저 업무도 안 되고……

저희 한나라당에서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위원회 많이 만들지 말고 실제적 사업을 하자는 내용이지 무조건 사람만 막 줄이자 이런 것 아니라는 말이지요. 필요한 인력은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또 업무영역이 늘어나는 만큼 그것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차별시정위원회는 빨리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환경위원회에서……

○**배일도 위원** 환경위원회가 아니고 노동위원회 예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한상공회의소 문제인데요. 우선선정 위탁훈련기관 아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저는 시대가 변했으면 훈련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재고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방향에서는. 그런데 현실적 조건도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훈련,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책정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의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변동이 온다는 것은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용 조건 또는 고용 관계의 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나 아니면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직접적인 연구용역을 한 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직업능력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양성훈련인……

○**배일도 위원** 우선 검토와 연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장관님께서 지금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연구는 없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니,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상대로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직업훈련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양성훈련을 줄이자 이런 의미에서 상공회의소의 사업비도 약간 줄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바로 끝내겠습니다.

국가의 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직업능력 향상교육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배일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에게 소득보장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두 가지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국가가 보장하는 보장체계를 확보하는 것, 저는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직업능력교육은 뺄 수 없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그나마 직업능력이 이러저러한 토대 속에서 노동부의 노력으로 그동안 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한 경제력을 확보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는 대한상의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한 학자의 견해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지금 있는 소계의 변동보다는 공공훈련 인프라라는 대단히 큰 틀 속에서 구축되어야 되는 만큼 쉽사리, 그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줄이는……

그리고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집이 끝났는데 예산이 2008년도에 안 돼 버리

면, 지금이 벌써 10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도부터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당장 줄여서 모집하면 채용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수많은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읽어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노동 분야 쪽에서 총 일반지출이 한 10조 정도, 10조 500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단한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장관께서 거두고자 하시는 정책목표는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행정을 정말 올바르게 이끌어서 국가 전체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런 건가요? 나는 실업률을 얼마로 낮춘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목표는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그다음에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소를 추구하고 있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소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 직업능력개발의 확충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예산을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저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써서 진짜 실업의 고통에 있는 국민들을 하루 빨리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그런 일이 노동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가 되어서 가지고 전부 행정으로만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좀 그렇게 되네요.

여하튼 경제가 좋아져야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야 이런저런 문제들이 잘 풀리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도 노동부가 미스매칭

을 푼다든가 여러 가지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각종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금제도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많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지요? 또 장려금 제도도 있고 지원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라도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아야 될 곳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장관 되시면 이런 제도들을 잘 종합하는 가운데서도 목표를 세워서 어디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있게 만드는 그런 노력 또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미흡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장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업으로 찢어발겨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에서도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업을 보면, 노동부의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단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짜리도 있고, 이게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통폐합할 것은 다 통폐합하고 정책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집중할 때, 정책 수단을 집중할 때 효과가 나고 또 그것이 문제를 좀 빠르게 푸는 방법 아니겠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약간의 견해차이지만 저희들은 일정한 통일성을 갖고 정책적 지향점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통일성하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하신 말씀을 귀담아서 더욱 더 통일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같은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그래 갖고 신규사업을 하나 또 만드셨더라고요, 42억으로 만드셨는데. 제가 없을 때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청년실업이 참 문제니까 어떻

게든 풀어 보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새로 만드신 거겠지요. 이것이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뭐가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고용지원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하고요?

○**정진섭 위원** 예.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정진섭 위원** 이 일이 결국 고용지원센터가 하는 일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보통 우리가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

○**정진섭 위원** 아니,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용지원센터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찾아오면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에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게 고용지원센터가 하는 일인데 지금 특별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또 만드셨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YES 프로그램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NEET족들, 별로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들,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분들에게 직업지도를 하고 이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진섭 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네요. 찾아온 사람도 제대로 취업으로 연결 못 하는데 의지가 없어서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찾아가면서 일을 하시겠다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양쪽을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색내기로 이렇게 찢어발기고 저렇게 찢어발기는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령성에 가서 요령대학에 가봤더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김에 그 학생들하고 면담을 좀 해 봤어요.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자기들이 왜 거기에 왔는지—물론 중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은 분명하지만—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취업이 될 것인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

어요.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이런 사업들, 또 수없이 찢어발기는 사업들, 중첩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예산체계를 한번 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아주 깊이 새겨서 정책적으로 봐서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피해 나가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실세 장관이시고 이제 떠나실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탁 잡아서 한번 틀을 확 바꿔 놓는 그런 과단성을 한번 보여주시고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늘 기금하고 예산 사이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죽 해 왔습니다.

예컨대 청사를 사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사야 되는데 왜 기금으로 사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하여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국가가 사야 될 청사를 기금에서 대신 사 준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청사를 기금에서 샀으니까 운영비도 기금에서 써라' 이제 거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구입한 청사에 대한 관리비는 지금 고용보험기금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반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출하다가 이제 또 기금으로 떠넘겨 온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떠밀리고 나면 나중에 노동부 예산은 다 기금에서 하라 그리고 일반예산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실세 장관께서 어떻게 그거 하나를 못 막아내십니까? 생각하면 백뿔억박에 안 되는 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길을 열어 놓는 것이 계속해서 뒤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 보셨어요, 막으려고?

○**노동부장관 이상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노력하지는 못했는데요.

○**정진섭 위원** 액수가 작으니까 그런 정도는 눈에 안 보이시는 건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고용보험기금이나 일반적인 세금이나 일정하게 부담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크게 구별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청사를 임차해서 쓰던…… 그래서 우리가 사서 그 보증금이, 반환금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그러면 그 정도라도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쓰자 그렇게 주장했어요, 전에. ‘그것도 좋은 의견이다’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실제로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해 봤는데 예산상 국고 수입의 직접사용 금 지원책이 있어서 만일 금년에 그런 임대보증금이 환수되어 들어오더라도 금년에 바로 쓸 수가 없고 일단 국고에 귀속시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 내렸습니다.

○정진섭 위원 하여튼 뭔가 계속해서 기금 쪽으로 다 떠넘기고 정부는 계속 손을 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이 노동행정 분야에서 사기저하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연결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는 돈이 2억 1700만 원인가 얼마 되지요? 그것은 왜 받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2억 얼마는 받고 있습니까? 차라리 안 받고 ‘우리 다 기금으로 하겠다’ ‘관뒤라’ 그래 버리지, 그게 의미가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리가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잖아요, 차관 왜 그러세요? 국회의원보다도 더 몰라? 2억 17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늘었나 줄었나 그럴 거야, 작년에 비해서. 그것을 뭐 하러 받느냐고요. 그 수많은 돈을 다 기금으로 집행하면서 2억 1000만 원 받아서 ‘일반회계 지원 받았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나 같으면 그거 안 받는다고 하고 말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답답해서 거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정진섭 위원님 기조와 비슷

한데요. 최근에 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책을 중요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정책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예산들을 뚜렷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중은 GDP 대비해서 아주 극히 낮습니다, 1% 이하인데요.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덴마크와 같은 고용 선진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제종길 위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OECD 국가에 비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을 통한 복지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이번 국감에서도 최대 논쟁 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고 또 2008년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비정규직보호법이 지금 시행된 지가 한 100일 됐는데 저희들이 자평할 때는, 사실상 과거에는 고용보장도 안 되어 있고 임금도 아무렇게나 주고 해서 비정규직들이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번에 그 법이 시행되면서 상당히 법적 보호의 테두리 내에 들어왔다 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법이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생겨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도 해소하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생겨나서 지금 사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없지 않지만 지금 현재 부정적인 효과의 사회적 파생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더 크고, 또 실제로 이 근본적인

체계를 허물려고 하는 경영계나 노동계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노동부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또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정말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해도 제가 최근에 언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회부장들을 모으고 같이 얘기를 나눴고 또 노동 담당 논설위원도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그 밖에도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많은 책자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정말 나름대로 홍보를 저희들은 했다고 보는데……

○제종길 위원 장관님께서서는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노동부의 편성방향을 보면요, 편성방향이 크게 5개인데 두 번째가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의 고용촉진 및 권익보호…… 제가 보기에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의 고용촉진 및 권익보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부의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집중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약 8억 9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9000억이 넘는데 예산상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물론 편성방향에 비례해서 예산을 짤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이 그만큼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아이디어나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마련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안착의 문제 또 보완·개선의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이 법을 안착시키면서 한편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가능한 한 완벽한 법으로 만들어 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국감 때 다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투자가 노동부 예산에서 여전히 부족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17대 내내 지적해 온 사항이고 조금 전에 정진섭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당국에서 노동 부문에 대해서 좀 소홀하거나 또는 국가정책에서 좀 차별되는 정책으로 보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전반적으로 예산의 경직성에서 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기금에서 쓰지 않고 일반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번번이 좌절을 느낍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의 집행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막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촉진공단의 기금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는 일반예산에서 200억 이상 400억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끝내 안 돼서 200억밖에 못 받았습니까.

○제종길 위원 그 점도 17대 국회 들어와서 일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보면 출산 후 휴가급여 비용의 국가 부담분을 고용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그다음에 자격검정사업과 같은 일부 예산에서 2005년 환경노동위원회가 채택한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일반회계 편성 확대추구안의 취지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의 안정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도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산재보상보험의 사무 운영비를 충당해야 할 국가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지켜지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17대 국회도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관님께서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지금보다 더 악화된 예산의 구성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좀 전향적인 정책과 미래 비전을 만들어 두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노동정책을 할 경우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님,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실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제종길 위원 그러면 노동부장관님의 활약에 좀 기대를 드리려고요.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제종길 위원 그것은 평가가 이번 11월에 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벌써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셨나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 문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종길 위원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제종길 위원 지금 장관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평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수요에 관한 통계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통계조사는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 한 가지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선정직종훈련이 굉장히 평가가 나쁜가요, 훈련과정이지?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우선선정직종훈련은요 기존의 실업자훈련하고 직종이 대부분 중복이 됩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게 충분히 업계와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선정훈련 자체의 평가가 나쁜가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가가 나빠요, 좋아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평가를 평면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비용 대비해서 본다면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각이 뭡니까?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비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께서도 보면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저는 이게 필요에 따

라서, 평가돼서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실업자훈련이나 다양한 훈련과정이 있는데 이 훈련사업 중에서 그나마 이게 평가가 가장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왕에 평가사업을 11월에 하는데 왜 굳이 현장, 민간이라든가 또 위탁하고 있는 운영자 측하고도 전혀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였는가,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우선선정직종 중에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문제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훈련이 사실상 실업자훈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업자훈련에 비해서 훈련비가 한 20% 높기 때문에 굳이 우선선정직종훈련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실업자훈련 예산을 증액하고 우선선정직종훈련은 줄이자 해서 이번에 줄이게 된 것입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면 실업자훈련은 훈련평가가 굉장히 우수한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실업자훈련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제종길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질문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업자훈련 과정이 굉장히 우수한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꼭 우수하다기보다는 중복된 사업이고 실업자훈련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이라는 것도 목적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100% 인정은 안 하지만 중복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중복된 게 문제지요. 진작 없애야 되는 거지요, 중복됐으면. 왜 그러면 여태까지 중복돼서 해 왔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중복됐다고 하면 평가가 좋은 것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훈련비가 일반적인 실업자훈련보다도 20% 높기 때문에 20%를 더 주고 훈련시키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어서……

○제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가 더 많았고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훈련비가 더 들었다라는 것인데 국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국감 때 다

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있었습니다.

차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고법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 특고법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지금 절실한 부분이 레미콘 기사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위원장 **홍준표** 레미콘 기사인데, 레미콘 같은 경우에 레미콘 믹스트럭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차관이 실무자니까 명확히 파악을 해야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위원장 **홍준표** 제 소관이 아니라니? 노동부 차관이 전체를 다 관장하는 거지요. 정책홍보관리실장 할 때하고는 다르지요. 국장이 아니지 않습니다.

레미콘 믹스트럭이, 지금 일반 화물자동차는 유류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레미콘 믹스트럭은 이게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 이 외에는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트럭 기사들이 정말로 힘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레미콘 믹스트럭을 어떻게 하면 특고법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유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인가 이것을 바꾸면 레미콘 믹스트럭을 화물자동차로 분류하게 하면 유류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레미콘 기사분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 부분이 우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법은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때는 다루더라도 그 앞이라도 현재 레미콘 믹스트럭 기사들이 고통을 느끼는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위원장님 취지에 따라

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부처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이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정부에서 법률을 안 바꾸어도 이 시행규칙만 바꾸면 건설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상 레미콘 믹스트럭 같은 경우에는 도로상에 다니는 화물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만 바꿔 주면, 레미콘 기사들이 유류대금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관급공사에만 지금 유류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일반 화물자동차처럼 민간업체 공사에도 유류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레미콘 믹스트럭은 건설기계로 분류하지 말고 화물자동차로 분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면 유류보조금이 일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훨씬 이분들의 고통이 저감이 될 겁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하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단병호 **위원** 산재보험기금 예산 삭감 문제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재보험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급여가 2894억 원, 7.5%가 감소되고 반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여유자금 운용은 1조 1000억 원, 55.7%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재보험기금이 운용된 이후로 보험급여 예산이 감소된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사실 산재보험급여는 11.4%나 증가했지만 금년 들어서 요양기간이 단축되고 요양환자가 감소되는 등 실제로 산재보험급여 증가율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해서 1%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또 금년 5월 예산편성 시점에서 07년도 산재보험급여 추정치가 3조 3287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 여러 가지 보험급여가 변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08년도에 약간 줄였습니다.

○단병호 **위원** 어쨌든 갑자기 추계기준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했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추계방식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 기준을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무슨 근거나 규정이 있어 가지고, 아

니면 기획예산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 추계방식을 계속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뭣 때문에 이렇게 추계방식이 매년 바뀔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추계방식이 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뭘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보통 예산액과 실제로 집행 추정액을 비교해 가지고 큰 차이가 나면 다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병호 위원** 아니, 그래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추계방식이, 매년 통일된 추계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추계방식이 없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추계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 추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크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해서 그 경향성에 따라서 다음 예산에는 약간 그런 경향성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 같아요. 추계기준을 변경해서 보험급여 예산액을 줄이고 대신에 여유자금 운용과 책임적립금을 늘렸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험급여를 줄여서 책임적립금을 늘린 것인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가지고 보험급여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추계방식을 사용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추계방식이 어떻게 2005년, 2006년, 2007년 다 틀릴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운용 정책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추계방식을 자꾸 끼어맞추는 식이 된다는 거지요. 그거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거는 오해라고 생각되는데요, 보험급여는 법정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고 늘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일정하게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산재 발생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향성을 보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약간 감소를 하게 된 큰 동기는 앞으로 산재보험법이 만일에 시행되면 여러 가지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그 액수가 좀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것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아마 노동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찾아가는 서

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산재보험 지급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엄격하게 지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도하게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 중에는 정부가 과도하게 이렇게 보험급여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실제 일하다 다쳐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이런 비판도 현장에서 있거든요. 이런 무리한 운용하고 다 연동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계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자꾸 보험급여를 줄여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노동부장관 이상수** 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겸허하게 반성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들은 결코 보험급여를 줄여서 산재기금을 더 늘려서 적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병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 가지고 정부정책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한다면, 피해를 본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홍준표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단병호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던 요구안대로 저는 올해 실집행액, 그러니까 2004~2006년 3년간 집행했던 실집행액으로 계산된 3조 6300억 원으로 이렇게 보험급여를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1조 1000억 원에 대한 여유 운용금만 줄이면 충분히 그대로 됩니다.

그것을 좀 늘리면, 물론 마구 쓰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산재로 인한 피해에서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금운용이 적어 놓으면, 보험급여액이 원래가 덩어리가 적어 놓으면 쪼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정부에서 톱다운 예산을

이렇게 시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단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병호 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위원장대리 제종길**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질의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IMD하고 WEF 등 경제단체들이 한국에 대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거기에서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61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 꼭 61등 하고 57개국을 대상으로 하면 57등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한국의 자본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외국의 자본가들은 참 그 기준에 맞게 합당해서 그런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두고도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확인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국가노사관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동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주로 하십니까, 이 2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노동행정을 대외에 제대로 알리자 해서 최근에도 대외홍보 방안에 대해서 몇 번 세미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작년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잡혔던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작년에 예산이 잡혔다고 보더라도 금년에 저희들이 OECD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또 ILO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대외적인 노동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IMD하고 WEF에 대해서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정말 그 질문 방식을 바꿔보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직접 접촉을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평가가 바로 투자와 연관돼 가지고 우리나라 경쟁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의지 참 좋으시고 그런데요, 결국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인력과 예산, 돈 이런 부분이 결미가 되어야 그와 같은 실적 내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순한 홍보책자 몇 개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시려면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면 벌리는 금액이 비싸지게 돼 가지고 결국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정부 차원의 대응기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얘기해서 예산도 더욱더 강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예.

이것은 국정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인데요, 그러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잡을 때, 늦었지만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느라 그동안 산업 외국 인력들이 도입되고요, 최근 고용허가제로 해서 외국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인력 중에서 일하는 중간에 사망한 숫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실무자한테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실무자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런냐 하면, 2002년치 이후에는 통계 숫자를 갖고 있어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관 이기권** 약 9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92명이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관 이기권** 예.

○**배일도 위원** 아이, 그러면 안 되지요. 차라리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그렇게……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관 이기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인력만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제출된 자료만 해도 418명이 일하는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 이에요. 외국 인력인데, 지금 우리나라 인권단체 또는 불교계에서 천도제를 지내려고 그러거든요. 이름을 알아야 ‘하늘나라로 가십시오’ 또는 ‘극락으로 가십시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추산 3000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숫자도 문제지만 그들이 현재 본국으로 못 가고 어딘가에 묻혀 있고 그 장소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권’ ‘인권’ 만날 입으로는 인권을 떠들면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다가 시신조차도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버렸다면 저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각 나라들이 언더로 해서 시체찾기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국제 문제화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관님께서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바를 제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섭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계속 예산 말씀을 몇 가지 더 해 보겠습니다.

각 산하단체 기관장님들 다 오셨는데 산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하단체를 평가해서 지원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무래도 산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해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톱다운 예산제도를 세웠기 때문에 노동부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 다 검토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정진섭 위원** 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예산이 국고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돈 전체 합쳐서 500억으로 한 100억 늘었다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하는 중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해 봐도 별로 오는 사람도 없다고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밖에 사람이 안 왔나?” 그랬더니 “우리 여기는 띄어 봐야 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원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예산을 100억씩이나 더 주는 이유는 뭐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고용정보원은 정말 참으로 중요한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수급정보를 정확히 알아야만 훈련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요. 특히……

○**정진섭 위원** 장관, 제 말씀부터 들어 보세요.

그런 정보시장이 없을 때, 그래서 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선투자를 하는 것 다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지요. 쟁쟁하게 하는 민간기구가 있는데 국가가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도 민간기구 하나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기구를 뭐하러 계속 키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고용정보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보원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은, 민간인 기구가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계속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진섭 위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정보를 얻는 데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접속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경쟁적으로 하는 건데, 그나마 민간기구도 따라가지 못하고 원장 스스로도 접속해서 오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기구를 예산을 100억씩이나 주는 기준이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내년엔 비용이 올라간 이유는 고용정보에 대한 수급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게 되는데 고용정보원이 수급정보 공급정보를 갖다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정진섭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국정감사 때 제가 고용정보원의 그런저런 점을 다 들어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그 부분

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산하단체 예산 등을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느냐, 실적을 평가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당연히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중의 하나입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게 보면 그 실적 평가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계속 더 얘기를 하도록 해 봅시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저희가 김성중 위원장님 모시고 지난번에 개성공단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술인력을 연수하기 위한 시설을 짓고 있었는데 다 지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짓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아직도 짓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누가 운영 주체이고, 예산은 누가 지출하는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으로 건립 중에 있고요, 19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7개 직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30억 정도 남북협력기금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개성공단 운영센터에서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전문적으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과 폴리텍의 전문인력 도움을 받아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종길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섭 위원** 남북협력기금을 쓰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건설만 쓰는 겁니까, 앞으로 운영도 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현재로서는 내년 운영예산도 남북협력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폴리텍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실비 보상을 다 받고 하는 겁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지

원 차원입니다.

○**정진섭 위원** 실비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고 여쭙 보잖아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비 보상의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인력의 급여가 개성공단 운영사업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진섭 위원**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요. 인력을 파견해 주는 것도 지원이예요.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지원입니다.

○**정진섭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파견 나간 사람만큼 추가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다 반영을 하는 겁니까? 폴리텍이면 폴리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지원하는 기관의 운영비 속에, 예컨대 폴리텍 같은 면 폴리텍대학에 들어 있고 한기대 같은 면 한기대의 비용에 들어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예산을 죽 찾아 봤는데 어느 항목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여쭙 보는 거니까, 그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것을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겠지요, 아직은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추산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배일도 위원님 질의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숫자가 지금 노동부가 짐작하고 추산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일부 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 명단을 추적해서 보다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일부 협조도 구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

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적해서 해당 국가나 해당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알려 주고 또 일부 국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노력에 협조를 해서 국가 대신에 민간단체들이 그들을 위안하고 위무하는 그런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노동자가 협조해 주시고 그런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제종길 위원** 그리고 앞서 질문하던 후속으로 계속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에서 기능인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문제도 사실은 있어서 국감 때 다시 질문하겠지만, 고용허가제의 문제라는 것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사람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고 비교적 고학력이다 보니까 3D업종에는 그들 자체도 선택이 안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실업자 훈련 또는 기타 다른 훈련인데요. 아까 실업자 훈련이 더 좋다는 것인데, 좋다는 이유가 단순히 경비가 좀 덜 든다 이런 것인데, 그동안 17대 국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실업자 훈련은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누차 지적받아 왔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훈련은 요식업이라든지 이·미용업 등 개인이 창업하기 쉬운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의 훈련 승인율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면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수료하고 취업하였다고 보고된 취업자의 50%가량이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더 비중 있게 하고, 물론 다른 쪽 훈련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취업률도 높고 또 기업이라든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모르는 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리고 기능인력,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찾아 보니까 적당한 예산항목이 없습니다. 만약에 고

등학교 나온 공고 졸업생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해서 어느 회사가 요구하는 기능인력에 맞게 취업을 하려면 노동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또 지금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러니까 실업계 고교를 나와서 자신의 기능을 더 높이고 싶은 사람한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십니까?

○**제종길 위원** 그렇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실업계 고교를 나와서 자신이 직접 산업현장에 나가지 않고 더 기능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원하면 폴리텍대학 같은 데 들어가서 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밖에 직접 산업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고급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용웅 이사장이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제종길 위원** 잠깐, 제가 여러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기능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에서는 내국인 고급기능 인력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학교법인기능대학대학이사장 박용웅** 폴리텍대학 이사장입니다.

○**제종길 위원** 폴리텍대학에서 정확하게 아실지 인력공단이사장이 정확하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조업 사업장에서 내국인 고급 기능인력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학교법인기능대학이사장 박용웅** 저희는 그래서 향상훈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종길 위원** 향상훈련을 해도 그 기능인력으로 해당인력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향상해서 관리직종으로 가거나 엔지니어로 빠져 버리면 해당 기능인력 부분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프로그램을 협력해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제조업이 계속 국제경쟁력을 잃어가는 원인 중의 하나도 내국인 고급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제올림픽에 나가는 기능인력도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출전자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점에 대해서 노동부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또 기능인력에 대해 대우도 향상시키고 기능인력센터를 만든다든

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가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산에 눈에 띄는 예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기능대학이사장 박용웅** 단순 기능인력은 외국인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중간 기술인력은 국내 인력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이라든지 그런 공고 졸업생들을 폴리텍대학에 입학시켜 가지고 2년 동안 향상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능인력 중에서 기술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향상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그 대부분 내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단순 기능인력은 외국인한테 의존한다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중간 수준의 기능인력은 저희가 향상훈련 아니면 폴리텍대학의 양성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업이 몰락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국의 중소기업 제조업들이 첨단업종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효과적으로 기능인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장책이라든가 지원을 해서 기업도 살리고 기능인력자들이 줄어들지 않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어느 예산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 R&D 투자도 더욱 더 확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급기술을 가르치는 훈련원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서도 우수한 고급기술을 양성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섭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홍준표** 자료 요구 하십시오.

○**정진섭 위원** 장관께서 기관 단체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실적을 참고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한 실적 평가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워크넷의 경우에 잡코리아와 각 분야별로 비교한 경쟁력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위원장 홍준표** 아까 차관께서 답변하실 때 ‘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관께서. 그러면 레미콘 기사 현황 및 대책을 제일 잘 아는 국장이 누구입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아니, 제 소관이 아니라는 뜻을…… 우리 부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특고법을 하는데 왜 그게 노동부 소관이 아닙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레미콘믹스의 유류보조금 문제는 노동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특고법을 추진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업계가 어떤 현황에 처해 있는지, 왜 특고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이것을 아는 담당 국장 누구입니까? 노동부 담당국장?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제가 답변드리기로……

○**위원장 홍준표** 아니, 국장님!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장의성** 근로기준국장 장의성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레미콘 기사를 특고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장의성** 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렇지.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들 월 평균 얼마 정도 수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장의성** 레미콘믹스트럭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홍준표** 예.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장의성** 120에서 한 1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230에서 270, 280만 원인데 여기에서 40% 정도가 차량유지비 보험료로 지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백이삼십만 원 가져갑니다. 맞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장의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특고법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왜 어려운지 알아야 돼요. 지금 경유가격

인상으로 운반비는 매년 인상됩니다. 그러나 운반수입 감소로…… 지금 건설경기가 형편없어지니까 수주물량이 없어요. 지금 1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기수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법 제정은 차후에 하더라도 시급하게 해 줘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요.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들여다 보라고, 시행규칙을. 건설기계 중에서 유일하게 도로에 활보하는 것은 레미콘믹스 차량입니다. 그 차량은 화물자동차로 분류해도 범체계상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화물자동차로 분류해 주면 유류대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이. 한 달에 한 사오십만 원이 지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장 특고법 매달리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우선은 갈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런 일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모든 조치를 다 취해도 정말로 이 사람 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난 뒤에 특고법에 올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지 이 사람들 지금 오륙십만 원, 칠팔십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 가지고, 그동안에 건설경기도 형편없어져 가지고 미분양상태가 속출하고 이래 가지고 아예 레미콘 수요현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여기가 어디 노동부만 대상으로 하는 데예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관이 들고 가면 정부 관계 차관회의에 가서 그것을 상정해서 ‘협력하자. 민생이 이렇다. 국민들 살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 사람들 진짜 까딱하면 폭동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차관회의 가서 관계 부처 건교부차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해 주자. 이게 충분히 화물자동차로 분류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우선 일차적인 대책이 되고, 그렇게 해도 정말로 이 사람들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고법 적용대상으로 해 주는 게 옳다, 그렇게 일차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대한 아무 연구도 하지 않고 ‘우리 부처 소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관회의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 차관께서, 노민기 차관께서 이 점 유의해서 꼭 이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사회 대타협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도 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시적 성과가 크게 없어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로 노동부 역할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아시아 뭐 포럼입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성중** 예, 사회적 대화 포럼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노민기 차관께서 예산 심사를 하실 때 동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인가 하는 비용이 보니까 얼마 들지도 않던데 그것 제대로 지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사회 안정이 되고 사회 대타협을 이룰 수 있으니까……

노민기 차관님!

○**노동부차관 노민기** 소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러십시오.

오늘 다 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동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노동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정된 시간 안에 예산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노동부 질의에서는 고희선 위원님, 신명 위원님, 조성래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저도 있습니다. 저도 서면질의……

○**위원장 홍준표** 그러니까 ‘등’이라고 그랬어요.

노동부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단병호 위원님, 조성래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그리고 배일도 위원님, 정진섭 위원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부 및 노동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준표** 예,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아침에 증인신청과 관련해서 양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원활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양 간사 간에도 협의할 것이지만 실제로 대운하에 관해서 저희 당도 증인을 신청했고 한나라당도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간사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간사 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우원식 위원님 말씀 좀 하셨겠지요?

○**우원식 위원** 예.

○**위원장 홍준표** 여기 간사가 없는데……

그것은 우선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협의를 해주십시오. 협의를 해 주시고 난 뒤에 환경부 소관 때 합시다.

1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국정감사 기간은 11월 2일까지라 아직 멀었습니다.

○**신명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홍준표** 국회 관례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간사 간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 위원** 결정해 주십시오.

○**정진섭 위원** 끝내시지요.

○**배일도 위원** 감사기간 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홍준표** 그것은 끝내고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감사기간 중에도 충분히 협의를 하니까요.

○**우원식 위원** 그런데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요. 운하와 관련해서 한반도 대운하, 경부운하뿐 아니라 지금 이미 건교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경인운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을 불러서 듣겠다고 하는데, 참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위원께서도 본인이 참고인 진술을 들어야 되겠다고 참고인 신청을 해 냈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 놓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진섭 위원** 이거 논의하려면 노동부 내보내고 합시다.

○**위원장 홍준표** 그러니까 우선 노동부 부분은 하고, 그 이야기는 끝내고 합시다.

○**제종길 위원** 본래 어제, 오늘 합의를 하도록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사가 안 계시잖아요,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내일 하자고 그랬고 오늘은 안 계시고 이러면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원장 홍준표** 합의하십시오. 두 분이 합의하도록 내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없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요구를 위원장님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배일도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견해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결정족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홍준표** 그러니까 노동부 회의 끝나고 하십시오.

○**배일도 위원** 실효성을 가지려면 간사 간에 더 논의를 하셔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일련의 과정이 지난번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정감사 기간에 운하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은 합의하라고 하시면서 합의하지 말라는 실질적인 압력을 속기록에까지 남겨 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에 참고인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막을 생각이 없으니까 우선 간사 협의부터 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그 간사가 본인이 신청한 것도 본인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 예.

○**위원장 홍준표** 우리 노동부 회의 끝내 놓고 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한국고용정보원장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직부대리

권재철
김철

○출석 위원(13인)

고희선	단병호	배일도	신기남
신명	안홍준	우원식	이경재
정진섭	제종길	조성래	한선교
홍준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전문위원	윤진훈

○정부측 참석자

노동부

장관	이상수
차관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 본부장	정종수
홍보관리관	허원용
재정기획관	박찬형
고용정책본부 본부장	송영중
고용정책관	이기권
노동보험정책관	이우룡
직업능력정책관	이채필
고용평등정책관	김태홍
감사관	이인규
노사정책국장	송봉근
근로기준국장	장의성
국제협력국장	이재갑
산업안전보건국장 직무대리	김병욱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 실무추진단장	조재정
경제사회발전위원장	김성중
노사정위원회장	이원보

○기타 참석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
한국노동교육원장	선한승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
학교법인기능 대학이사장	박용웅
한국기술교육 대학교총장	정병석